

가족정책 국내동향

2023년 11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한부모시설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

- 12일(목),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시행
- 중전 복잡한 시설 유형을 지원기능과 자녀발달 기준에 맞춰 개편
- 현장 애로사항 반영, 입소기간 연장하고 종사자도 증원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3.10.12]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8&btSn=709594

한국 고용 남녀 격차 OECD 국가중 8위...정부, 일·육아 지원 강화

[뉴스케이프, 박정원 기자, '23.10.23]
<http://www.newscape.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703>

고령화·장애 증가에..."이동·배설 등 돕는 돌봄로봇 활용해야"

[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23.10.24]
<https://www.yonhapnews.com/view/20231024056300530?input=1195m>

양육비 안 주고 버틴 123명...명단공개 등 제재조치

- 명단 공개(12명), 출국 금지(71명), 운전면허 정지(40명)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3.10.24]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8&btSn=709610

인구감소, 1인가구 증가...주거 패러다임 변하는데 정책 방향은?

[데일리팝, 김다솜 기자, '23.10.25]
<https://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72735>

"올해도 입학식 못 열었다"...저출산 쇼크에 '입학생 0명' 학교 164곳

[헤럴드경제, 안효정 김형철 기자, '23.10.25]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1025000249>

한국, 내년부터 '다인종 국가'

[한국경제, 김태훈 기자, '23.10.27]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2721681>

저출산 시대의 역설... 일하는 30대女 급증

[서울신문, 권승영 기자, '23.10.30]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d=20231031002003>

민관협력으로 국외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한다

- 우리금융그룹과 베트남으로 귀환한 결혼이민자의 한국국적 자녀 지원
- 올해 맞춤형 학습용 가구 지원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장학금 및 문화·교류활동 등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3.10.30]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8&btSn=709617

"아이 낳으면 자동으로 육아휴직"

[조선일보, 조백건 오주비 기자, '23.10.31]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3/10/31/3GNAETXQCNF35A2I6TJND052U/>

국민통합위, 청년 1인 가구 특위 출범...안정적인 삶 정책 제시

[이투데이, 최정훈 기자, '23.10.31]
<https://www.eteday.co.kr/news/view/2297937>

돌봄의 부담...가족돌봄청년, 여전히 복지 사각

[머니투데이, 임윤희 기자, '23.11.02]
<https://news.mt.com/mtview.php?no=2023110115397898187>

750만 1인 가구, 우울·고립감 크다...서울시 57가구 중 37가구 '외롭다'

[헤럴드경제, 이태형 기자, '23.11.03]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1103000177>

"다문화 가족 대신 이주민으로 불러주세요"... 통합위, 명칭 통일

[조선일보, 김동하 기자, '23.11.04]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general/2023/11/03/AWZSH7E3DJFVHYNNAWZVC4JARA/>

韓 가족지원예산 OECD 절반 이하...육아휴직 사용도 저조

[데일리안, 박진석 기자, '23.11.10]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9367144>

직장 내 다양성·포용성 높여 함께 일하기 좋은 기업 만든다

-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기업 내 다양성 및 성별균형 제고 공동연수 실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3.11.13]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8&btSn=709646

가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0)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2023-11-15	현행법은 행정처분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결혼중개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여 새로운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면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첫째, 결혼중개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인정하면서 그 승계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무한정 인정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양수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면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가 그 행정제재 처분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2023-11-09	현행법에 따르면 생계비 등의 복지 급여를 신청하려는 한부모가족은 금융정보·신용정보·보유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한편, 한부모가족 입소 수탁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독 권한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복지 급여 신청 시 정보제공 동의 서면을 전자문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과태료 부과 주체에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여 행정행위의 주체와 과태료 부과 주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한부모가족이 전자문서 방식으로 정보제공 동의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여 행정절차상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주체에 시·도지사·군수·구청장을 추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30조의2).
가족·생활·돌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1인)	2023-11-07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지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벌에 처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윤전허가 정지처분, 출국금지, 명단공개 처분 등의 요청을 할 수 있음. 그러나 법원이 감지명령을 결정하기까지 평균 2년이 소요되어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속한 제재 처분이 어렵고, 그동안 양육비 채권자의 생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귀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 이자를 추가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7인)	2023-10-25	현행법은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춘 아이돌봄모임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맞벌이 등의 사유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의 맞벌이 가정이 남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친인척에 의한 양육을 선호하여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아이돌봄비 수급 부족 등으로 제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로 하여금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부모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조부모의 아이 보호 및 양육서비스에 대한 지도와 권고를 하는 등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조부모에게 아이 보호 및 양육부담을 전가하여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부모에게 아이 보호 및 양육 서비스 비용을 지급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상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비용의 중복지급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할보미"란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시간 동안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로서 제19조의3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하고, "할보미 서비스"란 할보미를 통한 아이의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로 규정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시·도지사에게 할보미 양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게 함(안 제9조제1항). 다. 할보미가 되려는 사람에게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아이의 주 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할보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할보미 서비스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할보미 서비스(비용을 지급할 경우 따로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함(안 제19조의3 신설). 라. 누구든지 조부모에게 아이의 보호 및 양육을 강제하기 위해서 할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할보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조부모의 연령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할보미 서비스를 조부모에게 아이의 보호 및 양육 부담을 전가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9조의4 신설). 마.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자체장에게 할보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리감독하도록 함(안 제28조 단서 신설). 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보미 서비스 비용을 수급받은 경우 벌칙을 부여하여 재정부수 방지장치를 마련함(안 제35조제5호의2 신설).

가족관련 연구 동향

사회구분	연구명	주요내용	참고자료
사회통합 위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개요와 현황을 분석하고 지자체 컨설팅 결과 컨설팅 공통 이슈 및 우수사례 조사, 지자체 지역 간담회 결과 제시, 2차년도 사업계획서 검토를 통해 사업 공통지표 중심으로 사업 효과성과 분석하고 유관 사회서비스의 수급 연계 방안을 모색하여, 효과적 사업을 수행하고 공동사업(안)과 소외 예산을 추정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23-10」 https://www.kihasa.re.kr/publi/sh/report/view?seq=55360
	자살예방 전달체계 현황과 과제	국가 자살예방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지역 단위에서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역의 자살예방 인프라 확충과 추진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 원칙과 자살예방의 대표적 사례 관리 모형을 고찰하고, 우리의 자살예방 전달체계와 인프라 진단 결과를 토대로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모형' 구축을 목적으로 '지자체의 책무성과 권한 강화', '관계 기관 및 조직의 역할 정립', '지역 자살예방 인프라 확충을 우선 과제로 제안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급격한 환경 변화와 국민 마음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이때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자살예방센터, 지역사회공동체가 각자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대상자 중심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포럼, 2023. 10. No.324 .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tion/view?seq=57513&volume=57509
가족·돌봄	중장기 영유아 돌봄 체계 개편방안 연구	영유아 돌봄체계 개편 방향 탐색을 위해 영유아 돌봄 체계 국제 비교, 국내 및 해외 사례를 검토함 영유아 돌봄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틀을 만들고 수요 대비 공급, 접근성, 회복비용 지원, 교육비용 함수로 돌봄 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영유아 돌봄 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함 개편방안으로는 양질의 보육지원 체계 구축 방안과 보육비용지원방식 개편방안을 제안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보고서 2023-28」 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3863
	생활·활력 지원 사회서비스 혁신 모델 개발 연구	생활·활력 지원 사회서비스 혁신 모델 개발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의 관계, 생활·활력 지원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유관 사회서비스의 수급 연계 진단을 위해 우선 지원대상별 사회서비스 수급 현황과 디지털 플랫폼 가사지원서비스 노동실태를 살펴봄 생활·활력 지원 사회서비스의 표준서비스 모델은 가족돌봄 청년의 서비스 육구, 고립·은둔 청년의 서비스 육구, 중장년 1인가구의 서비스 육구, 한부모 가구의 서비스 육구에 따른 모델 개발이 이루어지고 지역사회기반 사회서비스 이용체계 확립을 전제로 사회서비스 사각시대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보고서 2023-24」 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3802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문화적 차이가 사회서비스 육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층분석	결혼이주여성이 살아온 출신국의 문화가 어떠한지 한국 문화와 얼마나 다른가에 따라 사회서비스 육구가 다를 수 있다. 이에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문화적 차이가 그들의 사회서비스 육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한국 거주 기간이 길수록, 한국어 능력이 좋을수록 가정방문교육과 한국어-한국사회적응교육 서비스에 대한 육구가 감소하는 반면, 자녀가 있으면 그러한 사회서비스 육구가 더 증가했다. 출신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가 클수록 가정방문교육과 한국어-한국사회적응교육 서비스 육구가 증가했다. 앞으로 결혼이주여성에게는 가정방문교육과 한국어-한국사회적응교육 서비스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방문교육과 한국어-한국사회적응교육 서비스는 연령이 낮고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짧으며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자녀가 있는 결혼이주여성에게 더 집중될 필요가 있다.	「보건사회연구, Vol.43, No.3, 2023. 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3830